

社會科學 분야의 正體性 위기

金 弘 明

(朝鮮大 政治外交學科)

1. 緒 論

현대의 사회과학에는 위기가 있는가? 이의 객관적 평가는 쉽게 동의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제는 그 자체의 목적보다도 위기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사회과학의 위기를 논의하려면 먼저 현재의 역사적 지형을 위기의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문명과 본능의 화해 할 수 없는 대립을 묘사한 프로이드의 이론, 기독교 세계의 해체—혹은 그 이전의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로—이래 겪게 된 정신세계와 사회의 분리에 따른 근대의 분열된 모습,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제 일반위기의 상황이 보여주는 이들 계기를 불들어야 한다.

이들 위기의 遠因 혹은 위기의 현실과 구분하여 현대의 학문세계, 특히 사회과학의 위기를 논의하는 데는 아마도 마르크스주의의 등장, 그리고 최근 수년이 보여주는 급격한 붕괴의 현상 속에서 위기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새로이 재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한정된 지면관계로 마르크스주의의 등장과 그에 따른 사회과학의 정체·위기의 현상을 고찰하는 데 그친다.

물론 최근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자본주의 중심부의 세계에서 보여준 이론의 불모화, 학문의 정착화에 따른 사회과학 일반의 무력화에 대립하여 사회내부적 모순이 현재화한 가운데 치열한 투쟁의 한 모습으로서 모처럼 등장한 역동적인 학문의 급격한 퇴조를 이루게 한 기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활발했던 제3세계의 학문활동은 여기서 대안없는 현실에의 굴복으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즉, 일제 그리고 해방 이후 독재와 반민족적인 사회기반 위에서 사회과학의 기생성과 동시에 그에 격렬히 저항하는 혁명적 비판정신의 혼효는 6·25 대전을 계기로 반공국시의 한계 속에서 민족적 학문의 황폐화로 끝나게 되었고 '60년대에 시작된 미국학문이 정착된 결과 국민적 요구와의 유기성을 상실한 기생적 학문의 독자적 성장과 지배가 전일화되었다. '70년대의 암담했던 유신시기와 '80년대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사회의 밀바닥으로부터 진정한 학문, 해방의 시각이 무시운 속도로 이에 대립하여 성장하게 되었지만, 일천한 학문의 역사가 지난 분파성과 비조직성 때문에 그리고 순식간에 들이닥친 동구 및 소련사회주의 붕괴현상의 충격으로 미쳐 이론과 현실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시기를 얻

지 못하고 한국의 현실에 의해 이론이 규정되어 버리는 상태로 이론의 현실규정은 밀리게 되었다.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독재와 부패가 도와준 투쟁대상의 가시성 문제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오래 기다려온 해방공간 속에서 소실될 위기에 놓인 형편이다. 사회과학은 체제내적 순응과 그 안에서 발전가능성을 보장받는 동안 현실안주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여기에 현재의 진정한 위기의 기초가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이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환의 길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의 글에 넘기기로 하면서 본고에서는 마르크스주의 등장이 가져온 위기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2. 마르크스주의의 登場과 轉化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변화는 물론 사회과학의 전화에 있어서 참으로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다. 물론 그것은 이들의 시기가 모든 면에서 새로운 전화의 계기였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내놓은 정치·경제·철학·역사 등의 방법론적 변혁은 이들에게 가장 칠자하게 투쟁했던 공로로 ‘불멸’의 작위를 획득한 칼 포퍼의 표현처럼 이제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과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곧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지금까지의 사회과학이 주제로 삼아온 여러 문제들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버림으로써 이들 문제에 부수된 용어·방법론·사상의 진수를 포괄하는 문제의 지형을 완전히 과거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다시 말하여 현실적인 적의성을 상실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후에 나타난 사회과학은 이들이 제시한 방법론적 시작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이들이 지펴놓은 끊어오르는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불 가능하게 되었다. 곧 새로운 사회과학은 자신의 역사적 소재를 찾기 위해서라도 마르크스·엥겔스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간단하다. 곧 오늘날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 유행하는 여러 경향, 분

파, 주창들이란 이에 적·간접으로 관계된 자들의 의식에 두관하게 자신의 개념, 방법론, 내용을 일단 마르크스·엥겔스가 열어놓은 사회과학의 토대와 관련시켜 보아야 하며 또한 후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사적 위치가 설정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은 현대 사회과학의 피한 수 없는 통과지점은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통과지점이 현대 사회과학의 원류를 이루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반대체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사회과학자들은 나뉘고 있다. 곧 마르크스주의자와 반마르크스주의자로 분기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해 역사와 사회의 운동법칙이 기본적으로 밝혀진 이상 사회과학의 과제는 이러한 유물론적·변증법적 관점에 충실하게 현상을 해석·과학화하는 것이라 믿는다. 사회과학은 데닌에 이르러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으나, 충실한 해석이 창조의 성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데닌 또한 마르크스·엥겔스가 제시한 사회과학의 발전과정 속에서 파악될 문제라 하겠다.

마르크스·엥겔스 이전의 사회과학적 열정과 상상은 사회현상의 이해라는, 법칙발견을 위한 분석과 종합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 전통은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해 사회과학적 ‘진리’의 발견으로 완료된다. 따라서 문제는 이제 이론적 발견의 수준이 아닌, 이 진리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수준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되었다. 투쟁이 이론을 대체했을 때, 이론은 공허하게 되거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어떻든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20세기는 분석의 시대도, 더구나 학문의 시대가 아닌 데닌의 소위 ‘혁명의 시대’이다. 여기서 세계사의 무대 또한 러셀, 라스키, 케인즈가 아니라 체계바라, 루문바, 보구엔 지암이 주연을 이루는 무대이다. 이처럼 사회과학이 학문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실천의 세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오늘의 시대가 즉자적 진리의 발견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역사적 현실이라는 진리의 대자적 존재를 획득하려는 투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미 청

년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 속에서 “철학자들은 역사를 해석해 왔다. 문제는 어떻게 변혁시키는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점을 간파했다. 물론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 철학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지 않았으며, 철학적 전화없이 현실의 변혁을 말하고 있었다.

나아가 마르크스·엥겔스의 사회과학은 실천에 앞서 올바른 이해·해석의 문제를 제기한다. 해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사회주의 사상사나 운동사의 과제이다.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상황이 비록 마르크스주의의 이론들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수정과 포섭의 확대를 거치게 된다. 곧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환경적 변수에 대응하는 사회과학의 수정과정을 줘게 된다.

특히 과거의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사회의 정치경제적 측면의 분석·설명에 집중했으나 인식론·예술론·미학으로 학문적인 관심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와 함께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단순한 문헌분석에서 실천이 요구하는 구체적 현실의 분석과 변혁의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을 다양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여러 방면에 걸쳐 기울이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의 출현은 그 아래 반마르크스주의적 사회과학의 등장과 비대화를 또한 초래했다. 반마르크스주의는 우선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명제의 허구성·비과학성을 증명하려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극복에 성공하지 못했을 뿐더러 마르크스주의는 이론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역사적 실체—현실사회주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투쟁과정에서 스스로의 변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들은 먼저 학문의 가치중립성이거나 반이데올로기를 강조했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분석에서 경제결정론적 오류가 있다거나, 19세기의 낡은 학문의 조악한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다거나, 하나의 계급이익을 앞세운 당파성을 학문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학문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들이 역겨워했던 반이데올로기 투쟁의 실효성을 담당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한다.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렇다고 마르크스주의의 당파성을 공격하는 반마르크스주의적 사회과학이 사회적 노동문화에 따라 그들의 실존근거를 제공해준 부르주아사회의 이데올로기성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반마르크스주의적 사회과학 또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참담하게 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부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사회과학은 불가피하게 계급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는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론은 마르크스주의는 물론 반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에 함께 통용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의 계급성을 학문적 한계로 규정하고 이의 극복을 주장했던 반마르크스주의적 사회과학이 그 자신마저도 이러한 한계에 놓인 것은 20세기의 역사사회적 환경의 필수현상이었다. 초기급성을 네세웠던 학문의 사회적 기능이란 기본적으로 노동문화를 따라 그에 Ying여가치의 일부를 떼어줄 수 있었던 부르주아사회의 현실을 재생산하는 데 동원되는 것이었다. 사회과학은 현실로 전락했으며, 거기서 나락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능변화는 사회의 자본축적이 베푼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경쟁과 유희의 끝없는 산물로서 발전된 기법과 이론의 포로가 된 덕택이지만, 이의 결정적인 원인을 몇몇 타일한—실력보다도 사회적 조작능력이—귀족학자들의 변덕과 호기심에서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곧 부르주아사회와 현실사회주의의 토대 위에서 성장해온 부르주아학문과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의 분열은 이의 극복과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허한 선전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새로운 종합의 장을 점령하려는 진정한 이론적 투쟁의 논리에 모두가 종속될 것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그것은 학문의 도구성을 인정하고, ‘적에의 경외’를 아끼지 않는 상호침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성질의 문제이다.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성의 회복과 전통의 토대 위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문적

창의성이 무책임한 순간의 자유와 구별됨은 물론이다. 나아가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학문, 특히 과거 전통의 위대한 계승을 다짐하여야 한다. 부르주아학문의 존립은 이제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처럼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부르주아사회는 내부의 압력으로부터,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사회과학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역사에 맞는 학문을 정립해야 할 단계에도 달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일면 현실사회주의에 대응할 더 이상의 도구성일 필요가 없으며, 타면 내부의 새로운 일반이익을 실현할 요구에 직면한다. 마르크스주의와 부르주아학문이 진정으로 계급적 자기방어의 장치로서 학문의 도구성을 포기하고 인간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의 형성에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지배자에게 화관을 바치는 영원한 노예근성을 버릴 수 없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3. 社會科學의 정체성과 自由主義

우리는 역사적 현재를 이해하기 위하여 전哲에서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이제 우리는 사회과학의 위기를 그리고 위의 근거를 이루는 자유주의의 문제를, 특히 미국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사회과학의 정체성과 위기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현상 이전의 문제로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일별할 수 있다. 첫째,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의 구멍에서 법칙화로 이어지는 대신, 도구·기능화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미 논의했던 것처럼 현실사회주의에서나 자본주의에서 모두 사회과학은 이데올로기의 도구로서 자신의 위치에 충실히 재인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마르크스·엥겔스나 레닌의 어록을 충실히 재인용하는 동어반복적인 학문의 정체성을 노정하였다. 그러한 사회에서 학문의 창의성과 발전이 지체되었던 것은 ‘두 진영’으로 분열된 혈존의 세계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부르주아학문의 도구성은 사회주의학문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현실로 등장

했다.

부르주아사회는 세계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축적정도와 세계의 지배영역을 고려하더라도 월등히 우월한 진영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등장은 벌써 부르주아社会의 착취성·모순의 본질이 드러난 19세기 중엽 이래 더 이상의 관용과 ‘열려 있는’ 사회일 수는 없는 상황을 가져왔다. 학문의 자유, 자유로운 발전은 이미 19세기에 마감되었으며, 그 이래 정체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부르주아 사회과학의 정체성·위기는 특히 2차대전 이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회과학이 변용·적용하는 데서 나왔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종래 미답의 여러 영역을 과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국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필요를 느꼈으며, 정치·경제·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분야를 급속히 발전시켰다. 그것은 주로 정책학으로서 영역지배의 지식을 개발하고, 정치공학으로서 인간지배의 기술(선전술·폭동진압술)을 실험을 통해 발전시키며, 정치행태론으로서 선거·엘리트(특히 군부)의 행태분석을 기법으로 여론조사에 이르기까지 확대 발전시켰다.

그것은 정체가 아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개발·발전된 기술·방법·개념을 사회과학의 제 관심영역에 실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동시에 이론의 불모화를 초래했으며, 사회과학은 유용성의 차원에서 가치가 결정되는 문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먼저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사상적 틀은 흄스, 록크에 의해 대변되는 소위 ‘철학적 개인주의’에 기원하고 있다. 곧 개인의 자유, 소유권의 절대성을 기초로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혹은 적의하게 이의 기능을 수정하려는 이론을 말한다. 사회와 국가의 실체성이 부인되고 개인만이 주체로 파악될 때, 인간의 자유란 어떻게 한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 제약없이 최대한 허용할 것인가를 문제로 한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인간의 욕구와 이기심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의 이론

적 전제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에 대한 적의를 법의 범위 안에서 보장하여 사회적 연대를 거부하고 있다. 인간간의 공동체적 협동의 문제 보다도 타인을 대상화한 각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투쟁장소로서 사회를 가정하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란 끊임없는 자기학대를 위한 공간적—물리적—충돌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었다. 소유권의 제도화는 이러한 폭력을 피하려는 최선의 방법—폭력의 제도화—으로서 자유의 표현이다.

사회과학의 안일성을 지적하면서 W.C. 매월리암스는『미국의 연대이념』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을 자기의 사적 욕구의 충족에만 관심을 가지는 비정치적 인간으로 보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자가 현대의, 자유주의 전통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한 이론에 의하면 중요와 안정은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회과학자는 이러한 전체에 습득되어 사회의 가장적인 진실있는 외관 이상을 추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사회과학의 이와 같은 혼수상태는 이러한 외관으로서 사회현실에 대한 공격을 체제내적인 틀의 연장에 머물게 했다. 즉, 사회과학의 비판적 정신은 새로운 사회의 창출보다도 기존 사회의 교정에 주관심을 돌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찌보면 이들 이론가의 배경이 뾰족 부르주아적이라든가 현대 사회과학의 기능에 관련되는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회과학이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의 사상적 기초 위에서 있는 한 그것이 내뿜는 정치적 상상력 또한 기성질서에 투영된 빈곤한 자기모습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다.

사회과학의 불모성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등요와 사회적 위기의 해소에 따른 정체성으로 이어졌다. 곧 2차대전 이후 두드러진 대중소비시대의 경향은 사회과학에서도 질의 문제 보다는 양의 측정에 모든 것이 치우치는 현상을 빚게 된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모델의 차별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 1의적인 중요성은 삶을 양에 의해 측정하려는 사회설리를 조장하는 전반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과학은 더 이상 진리와 고차적 삶이라는 순수·실천의 이성을 상실한 채 다방면의 양적 측면을 묘사·측

정하는 데 만족했던 것이다.

또한 사회 내의 모순을 제 3세계로 수출할 수 있었던 미국과 서구는 자기 사회 내의 계급 대립을 ‘사회국가’의 철학 속에서 완화하고 그에 따라 산업평화를 이룬다. 사회과학은 현상의 분석, 아니면 소련사회주의의 비인간적 모습을 이론의 영역에서 서구 마르크시즘에 맡기는 등 비판부제의,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진행하였다. 그것은 사회통합이 절정에 이른 마르크제의 소위 ‘일차원적’ 사회에서 사회과학의 운명이었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과학은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위축된 가운데 창의성이 말휘될 수밖에 없었다. 왜나하면 그 사회의 이론은 성질상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행의 이론적 정식이어야 했기 때문에 과정의 차오가 허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과학은 자신의 발전을 사회 자체의 기본명제에 종속시킴으로써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성에 지배된 결과로서 장애 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結 論

서구와 현실사회주의의 사회과학이 필연코 정체와 그에 뒤따른 위기를 내포한 발전을 거듭해 갔던 20세기의 후반기에 그 반대의 경향들이 소위 제 3세계의 곳곳에서 일어났다. 어찌보면 그것은 국지주의, 지식만능의 이론추구로 이어지는 폐단마저도 있었다. 그러나 이의 연원은 서구자본주의의 대상으로서 규정된 종속과 피착취의 상황에서 찾아질 문제이다. 이 사회에서 제도권 내의 지식인들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서구적 사회과학을 도입·확산시켰으며, 이 수입된 이론이 현실적 적실성을 지니지 못한 만큼 더욱 강렬하게 그에 대항하는 비자본적 사회과학의 발전과 현실의 투쟁을 유발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회과학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과학을 현실변혁의 과학으로 발전시키는 시기를 가져왔다. 서구의 정체와 위기는 오히려 후진사회에서 그 반대상황을 빚은 것이다. 그러나 이 새 상황은 다시금 현실사회주의 봉괴현상과 함께 좌초·이탈의 모습을 가져온다. ━━